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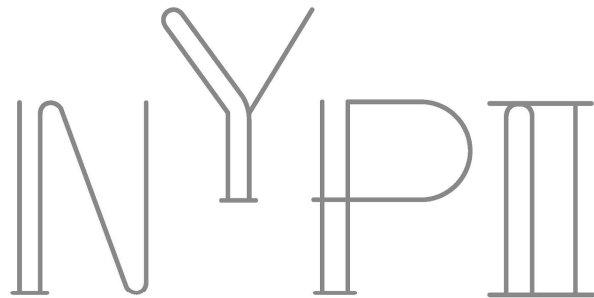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일 시 2017. 8. 28(월) 14:00~17:00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주 최 진선미 의원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 원 선거연수원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개 요

- 주 최 : 진선미 의원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후 원 : 선거연수원
- 기획취지 : 최근 선거권연령하향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모의투표와 청소년의회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본 세미나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의 의의를 논의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함.

프로그램 일정표

시 간	내 용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식	
	개회사	진선미 의원
	환영사	서인덕 원장(선거연수원)
	축 사	이종원 부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4:20-17:00	학술세미나	
	사 회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20-14:45 (25분)	발표 1	대선모의투표의 의의와 과제 김진곤 한국 YMCA 전국연맹 국장
14:45-15:10 (25분)	발표 2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와 과제 조성익 금천구청 교육지원팀 주무관
15:10-15:35 (25분)	발표 3	청소년정치참여 요인 및 활성화 방안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35-15:50	휴 식	
15:50-17:00	종합토론 “청소년정치참여활성화 방안”	
	사 회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1	임영진 고운중학교 교사
	토론 2	이종희 선거연수원 교수
	토론 3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 4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센터장



목 차



1	대선모의투표의 의의와 과제	1
	김진곤 [한국 YMCA 전국연맹 국장]	
2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와 과제	17
	조성익 [금천구청 교육지원팀 주무관]	
3	청소년정치참여 요인 및 활성화 방안	33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	토 론 1	49
	임영진 [고운중학교 교사]	
5	토 론 2	53
	이종희 [선거연수원 교수]	
6	토 론 3	57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7	토 론 4	67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센터장]	

1

대선모의투표의 의의와 과제



김진곤 [한국 YMCA 전국연맹 국장]

청소년이 직접 뽑은 대한민국대통령 모의투표의 의의와 과제¹⁾

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력개발국

I. 들어가며 -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

선거를 통해 시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자가 권한을 위임받아 정치적 행위를 대리하는 대의정치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이후 지금은 전 세계적인 정치 체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신라시대 육부촌에 모여 씨족의 대표자가 나라의 온갖 일들을 결정하던 시대에서 지방호족들을 제압하고 강력한 왕권국가가 지속되다가 일제의 침략과 패망을 거쳐 민주공화국이 탄생되기까지 숱한 민중들의 봉기가 있었고 이는 정치는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부당한 권력에 맞서 피 흘려 물은 우리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

세계적으로 선거라는 제도가 생겨나고 형식상 절대 권력은 무너졌지만 인종, 성별, 재산, 교육정도에 따른 참정권의 제한은 여전하였다. 왕정과 제국주의시대를 지나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국가들의 대부분은 민주주의, 국민 주권주의, 대의 정치의 원리가 구현되는 ‘공화국’ 형태의 국가체제를 선택하였지만, 적지 않은 나라들은 다시 독재자들의 핏박 속에 민주주의를 유린당하며 무늬만 ‘민주 공화국’인 체로 긴 시간을 보내왔다.

우리나라도 30년전 오늘, 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여러 가지 정치상황으로 인해 군인정치를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대통령 직선제’라는 기본적인 시민권을 다시 찾아왔고 실질적 민주주의 대한 열망을 고조시켜 5년 후에는 마침내 문민정부를 탄생 시키게 되었고,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한 장미대선을 맞이하게 되었다.

1) 본 원고는 2017년 6월 17일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19대 대한민국대통령 운동 결과 토론회에서 한국YMCA 청소년운동분과가 발표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20년째 요구하고 있는 18세 선거권

‘직장도 있고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간다. 왜 투표만 안 되나’

‘정당한 참정권을 달라’

‘헌법소원이 이어진다. 노동계·야당도 나섰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여론의



18살청춘의 ‘이유있는 반항’

“투표하고 싶어요. 세 번으로 나눠달라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정치적으로
안타깝게요.”

어라라고? 직장도 있고 세금도 내고 군대도 간다.
왜 투표만 안되나. ‘정당한 참정권을 달라’
헌법소원이 이어진다. 노동계·야당도 나섰다

투표권을 줄 것 같은 ‘청춘’이라고도
한번이 투표권을 ‘권리’라고도
한번이 투표권을 ‘책임’이라고도
한번이 투표권을 ‘책임’이라고도

투표는, 이것은 선택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투표는, 이것은 선택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1997년 5월 24일자 한겨레신문 기사

주목을 받았던 ‘18세 참정권’ 관련 기사가 아니다. 20년 전 한 신문의 기사의 내용이다. 투표하고 싶다고 인터뷰한 18살의 청년은 지금 40대를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지만, 18살 청춘은 아직도 투표할 수 없다.

지면상 신지 못하지만 이후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기사는 반복

되어 옴을 알 수 있다.

99년에는 ‘청소년연대’를 준비하며 ‘18세 참정권 허용’ 운동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정당을 만들어 사회를 비판하고 정치참여를 이뤄내고자 한다는 ‘99모스키토’라는 연극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요구는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으며, 청소년 당사자조직의 결성, 연극이나 음악 등 문화적인 형태로도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사회문화적 여건이 그 때의 상황과 비교해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청소년 참정권 요구’에 대한 다양하고 대중적인 방식의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YMCA 청소년정치참여운동

한국YMCA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그리고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참여와 자치를 통해 성숙해지는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한 “만18세 참정권 운동”을 어울마당, 열린광장, 청소년100인포럼, 정치참여운동, 지역사회 캠페인 등을 통해 지난 2005년부터 실천해 왔다.

- 2004년 - 18세 선거권 낮추기 청소년연대 활동
- 2005년 - 18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낭랑포럼과 캠페인 개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18세 참정권 건의
- 2006년 - 5.31 지방선거참여운동 “청소년이 보이는 지역사회” 정책 제안
- 2007년 - 17대 대선 참여운동
청소년100인포럼 - 교육 및 청소년 15대 평화의제 선정 및 제안
- 2008년 - 4.9 총선 참여운동 / 15대 평화의제 지역사회 창조적 실천
- 2009년 - 청소년 100인포럼 - 3개분야 9개의제 발굴, 15대 실천사항 결의
경기도교육감 보궐선거 참여운동
- 2010년 - 6.2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참여운동 및 캠페인
(도단위협의회별 교육의제발굴)
경기도, 강원도교육감 후보초청 토론회, 전남메니페스토운동
- 2011년 - 청소년100인포럼 평화의제발굴(5개영역 24개의제 발굴)
- 2012년 - 4.11총선참여(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우리의 공약 best5),
18대 대선 참여운동
- 2013년 - 청소년YMCA 전국과제로 18세 참정권 운동 결의
청소년100인포럼 - 청소년 참정권 토론
- 2014년 - 6.4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참여운동 및 캠페인
강원도교육감 후보초청 토론회,
전남메니페스토운동(도단위협의회별 교육의제발굴)
- 2015년 - 청소년 100인포럼 - 6개분야 13개의제 발굴, 청소년 참정권 토론

- 2016년 - 4.13 총선 참여운동(청소년의 원하는 교육정책 제안)
한국YMCA 18세 참정권 운동 제안
- 2016. 7. 31 청소년YMCA권역하령회에서 “18세 참정권운동” 논의
- 2016. 8. 7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에서 “18세 참정권운동” 논의 및 결의
- 2016. 9. 9 “18세 참정권운동” 청소년실무자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 논의
- 2016. 9. 26 한국YMCA 사무총장협의회에서 “18세 참정권운동” YMCA운동의 중요한 아젠다로 결의하고,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 본부 발족하기로 결의
- 2016. 9. 29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회에서 70개 지역YMCA와 회원들이 함께 하는 “18세 참정권운동”으로 전개하기로 결의
- 2016. 10. 8 한국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발대식
- 2016. 10. 29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청소년 국회 토론회
- 2017. 2. 25 청소년YMCA전국동령회에서 18세 참정권 운동 전국과제로 결의
- 2017. 3. 16 한국YMCA 사무총장협의회에서 대선모의투표운동 결의
- 2017. 3. 19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LT에서 대선모의투표운동 진행 결의
- 2017. 3.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질의(기청연 2017-03-018) /
2017. 4. 17 회신답변(해석과-1286)
- 2017. 3. 21 한국YMCA 이사회에서 대선모의투표운동 결의
- 2017. 3. 23 한국YMCA 청소년실무자회의에서 대선모의투표운동 결의
- 2017. 5. 9 나만 안되는 선거, 투표권을 줄게
 -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모의투표 실시
 - 60,075명 선거인단 등록, 51,715명(86.08%) 대선모의투표 참여
- 2017. 5. 9 청소년이 뽑은 제19대 대한민국대통령 선출
 - 당선인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
- 2017. 8. 17 청소년이 뽑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당선증 전달
 - 청소년대표단 50명 참여

청소년 모의대선투표 진행과정

1) 투표참여방식

선거인단으로 사전 신청한 만 19세 이하 대한민국 청소년 선거인단 20만명이 전국 70개YMCA를 비롯한 사전 고시된 투표소 및 온라인 투표소에서 19대 대통령 후보에게 직접 투표한 후 개표를 통해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한다.

2) 참가지역

온라인 - 전국누구나 19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오프라인 투표소 설치 - 서울, 구리, 수원, 시흥, 안산, 이천, 원주, 춘천, 논산, 당진, 아산, 홍성, 세종, 대전, 전주, 군산, 진안, 목포, 순천, 여수, 광주, 대구, 부산, 김천, 문경, 안동, 영천, 마산, 양산, 진주(30개지역)

3) 진행절차

(1)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구성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 각 권역별(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3월 중

(2) 대통령 선거를 위한 20만명 청소년선거인단 모집 → 4월 1일 ~ 5월 9일(한달간)

① 대상 : 투표권 없는 만 19세 이하 대한민국 청소년 20만명

② 방법 : 온·오프라인 모집

- 온라인 : www.18vote.net를 통한 온라인 등록

오프라인 : 한국YMCA 전국연맹, 참여단체 등

③ 홍보 : 웹자보, 카드뉴스등을 활용한 SNS 홍보, 포스터를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3) 각 정당별 19대 대통령 후보 공약 및 정책 제공 → 4월1일 ~ 5월 8일

① 방식 : 홈페이지(www.18vote.net), 페이스북, 다음카페등을 통해 각 후보자별 공약 및 각 정당의 정책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함.

4) 청소년이 직접 투표하는 대통령 선거일 : 5월 9일(화)

① 투표일 : 사전투표일 - 5월 4일~5일

본 투표일 - 5월 9일(화) 오전 6시~오후 8시

② 투표방식 : www.18vote.net 통한 온라인 선거

- 오프라인 선거 : 지역YMCA등 지역거점 투표소를 통한 현장투표
- 현장투표는 본 선거일에만 실시함.

5) 개표 및 발표 → 5월 9일 선거종료 후

(기자회견과 함께 발표 및 대통령 당선증 전달)

① 개표 : 온라인 - 한국YMCA전국연맹

오프라인 - 각 지역 투표소에서 개표 후 연맹 사무국에서 취합

② 전달 : 특정한 날 기자회견과 더불어 직접 당선증을 전달함(청소년이 뽑은 대통령과 실제 대통령 당선인이 일치할 경우 청와대에서 직접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안을 모색)

6) 청소년대선 모의투표 결과

(1) 청소년 선거인단 참여인원 : 60,075명

(2) 청소년 모의투표 참여인원 : 51,715명(86.08%)

(3) 모의투표 결과 :

지역	청소년 투표인단 참여인원	후보자별 득표현황				
	전체 순위	1위 문재인	2위 심상정	3위 유승민	4위 안철수	5위 홍준표
총 합 계	51,715명	1위	2위	3위	4위	5위
강 원 도	2,814명	심상정(1,074명)	문재인(966명)	유승민(320명)	안철수(311명)	홍준표(84명)
경 기 도	12,279명	문재인(4,698명)	심상정(4,689명)	유승민(1,287명)	안철수(1,152명)	홍준표(288명)
경 상 남 도	4,821명	문재인(1,756명)	심상정(1,698명)	유승민(630명)	안철수(425명)	홍준표(221명)
경 상 북 도	3,530명	심상정(1,108명)	문재인(1,055명)	유승민(566명)	안철수(459명)	홍준표(261명)
광 주 광 역 시	2,413명	문재인(1,218명)	심상정(724명)	안철수(264명)	유승민(154명)	홍준표(15명)
대 구 광 역 시	2,140명	심상정(742명)	문재인(675명)	유승민(296명)	안철수(202명)	홍준표(113명)
대 전 광 역 시	1,693명	문재인(642명)	심상정(622명)	유승민(182명)	안철수(156명)	홍준표(61명)
부 산 광 역 시	3,090명	심상정(1,169명)	문재인(1,131명)	유승민(420명)	안철수(246명)	홍준표(90명)
서 울 특 별 시	6,148명	문재인(2,559)	심상정(2,392명)	유승민(602명)	안철수(440명)	홍준표(100명)
울 산 광 역 시	752명	심상정(288명)	문재인(285명)	유승민(95명)	안철수(57명)	홍준표(18명)
인 천 광 역 시	1,994명	문재인(819명)	심상정(813명)	유승민(173명)	안철수(132명)	홍준표(34)
전 라 남 도	2,652명	문재인(1,294명)	심상정(800명)	안철수(259명)	유승민(210명)	홍준표(25)
전 라 북 도	2,832명	문재인(1,406명)	심상정(901명)	안철수(241명)	유승민(210명)	홍준표(37명)
제주특별자치도	370명	심상정(163명)	문재인(151명)	유승민(29명)	안철수(19명)	홍준표(2명)
충 청 남 도	3,035명	문재인(1,130명)	심상정(985명)	안철수(372명)	유승민(297명)	홍준표(114명)
충 청 북 도	1,150명	문재인(460명)	심상정(459명)	유승민(119명)	안철수(76명)	홍준표(21명)
미 입 력 (해외동포포함)	2명	심상정(2명)				

청소년모의 대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러한 흐름속에서 청소년YMCA가 제안하고 한국YMCA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결성한 ‘청소년이 직접 뽑는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본부’의 대선모의투표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선모의투표를 통해 첫째, 기자회견, 캠페인, 국회토론회 등의 단순한 형태의 어드보커시 운동을 넘어 청소년 당사자들의 참여를 직접적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는 일각에서의 우려를 견어내었다. 약 6만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하여 약 86%인 5만1천여명이 투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결코 정치에 무관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오프라인 투표소가 설치된 한 지역에서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의 청소년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투표소를 다시 찾아와 투표한 사례도 있었다.

둘째, 선거권은 정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스스로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선거인단으로 등록하고 투표를 하기전까지 모의 투표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이 선택하고자 하는 후보들의 면면과 그들의 정책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시시각각 보도되는 포털과 언론의 기사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 후보는 어떠하고 저 후보는 어떻다는 등의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세워가는 과정속에서 자연스레 일반 유권자들과 별 다른 없는 행동패턴을 보여주었다.

셋째, 보다 깨끗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연령 하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개표결과로 추정해보면, 참여한 청소년들이 후보자를 선택한 가장 큰 기준은 ‘도덕성’과 ‘정책’이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역연고에 따른 투표행위나 특정 정파적 선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²⁾ 실제 대선의 결과와 모의 투표를 비교해보면 1위 후보를 제외하고는 전혀 다른 개표결과를 볼 수 있었다. 실제 대선에서 득표율 6.5%로 5위를 차지한 심상정 후보가 모의대선에서는 1위 문재인 후보와 불과 3.12%의 격차 밖에 나지 않은데다가 지역별 개표결과에서는 심상정

2) 향후 지역 유권자수와 비례한 교차분석, 투표자의 성향 파악 등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후보가 1위를 차지한 곳이 더 많다는 것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호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대선기간동안 보여준 심상정 후보의 성소수자 인권옹호 행보, TV토론에서 보여준 네거티브 보다는 정책 위주의 토론 자세 등이 때 묻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호감을 얻었으리라 추측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모의투표를 통한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기존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선거연령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에 개정에 있어 작지만 긴 시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18세로의 선거연령 인하에 적극적이고, 국민의당은 비교적 우호적인데 반해, 이에 대해 반대 입장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령인하에 대한 일치된 입장을 내 놓지 못한 바른정당은 갈수록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혹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더욱 더 선거연령 인하를 내부적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하지만 여론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명확한 결과 앞에서는 오히려 이기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II. 제언 -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과제

민주주의 발달의 역사는 시민권의 확대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시민이지 못했던 여성과 시민일 수 없었던 유색인종들과 그 사회의 시민이어서는 안되는 소수 종교의 사람들이 같은 사회의 시민임을 인정받기 위한 역사다. 고학력과 경쟁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하루 빨리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 나은 시장으로의 편입을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하는 시간에 정치적 권리 따위는 나중에 누려도 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아니 어쩌면 스스로가 억눌러 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스스로 시민이 되고자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일 것이다.

하나 - 정치교육센터의 설치와 정치교육의 제도화 요구

지난해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첫 번째 자리에서 한 청소년활동가의 고백은 우리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실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청소년들 회원들조차 그들이 왜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지 관심이 없으며, 청소년 참정권 실현에 반대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아서 과연 이것을 당사자 운동의 차원에서 추동할 수 있을까”는 자조 섞인 푸념이었다.³⁾ 다른 활동가들도 그의 물음에 동의하며 캠페인을 위한 캠페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관련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당장은 제도적 보완이 어려우니, 교육커리큘럼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교육-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 하고 독일과 같이 ‘정치교육센터’⁴⁾를 설립하여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워가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약 사항이기도한 18세 참정권의 확보는 비록 지금 현실화 되지 못했지만, 교육체제 안에서의 정치교육의 제도화는 청와대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과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 - 모의투표 제도의 공식화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9세의 투표율은 20, 30대 보다 높지만 20대가 되면 투표율은 전 세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인과 정책에 대한 거리감 즉, 자신의 삶을 정치가 나아지게 하지 않는다는 정치에 대한 불신은 이후 정치 참여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출된다. 우리가 진행한 이번 모의투표는 앞서 제시한 정치교육의 제도화와 더불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에 대한 정책분석을 하고 토론을 거쳐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있으며,⁵⁾ 독일은 교육부가 연방의회 선거 직전 모의투표를

3) 사실 여러 가지 여론조사결과가 혼재하지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선거연령을 지금보다 낮추 것을 반대하는 응답이 20%~50% 내외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4)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 1952년 설립되어 국민들에게 의회주의적정부 형태와 민주주의 정치규칙을 교육하고 있다.

5) 대선기간 동안 미국 어린이 잡지 ‘Scholastic News’에서는 전국의 153,000명의 만 6-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후보를 선택 할 것인지 모의 투표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등 올 한해 미국 사회 전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하였다.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만 18-19세 유권자 중 80% 이상이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정당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타 연령대 보다 실제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수의 청소년들이 명확한 정치적 지식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미국에서는 선거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자는 요구도 계속 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 또한 보통선거가 실시되는 9월전에 각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하며 학생회에서 정당원을 초청하거나 정당에 가입된 학생들이 학교에서 유세를 벌이는 풍경을 볼 수도 있다. 핀란드는 모의투표를 주요 교육과정의 하나로 진행하고 있고,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코스타리카의 경우는 국가기관의 주도하에 12살 이상 청소년들에게 모의투표 자격을 주어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교의 교사는 최근 수업시간에 대선 '모의투표' 계기교육을 하려고 교감과 교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교감 결재는 받았지만 교장이 끝내 결재하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교육청이 대선 계기교육 권장 공문을 학교에 보냈지만 교장에게 가로막힌 것이다.⁶⁾

이와는 달리 거창 셋별중학교의 경우 학교 차원에서 전교생 177명이 이번 대선모의투표에 참여하였다. 얼마 전 1위를 차지한 심상정 후보가 당선증을 직접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모의투표 활동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과 방식의 논의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

셋 - 정당 활동의 보장 요구

앞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참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교육받아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정치의 영역은 자기의 삶과 괴리되어 있음을 어릴 때부터 확인받으며 자란다. 정치는 어렵고 특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보다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같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책을 만들고,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정당이다. 독일은 각 정당에 따라 다르지만 14세~16세, 영국과 프랑스는 제한이 없는 정당도 있지만 14세~15세 이상이면 정당가입이 허용된다. 핀란드의 경우 15세 이상은 정당의 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교안에서도 허용된다. 최근에는 대선 후보들이 직접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정치가 학교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실험인 것이다.

6) 오마이뉴스(17.05.01 윤근혁기자) 교육선진국은 학교 모의투표 '대박', 한국은 '쪽박'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한다면, 정당의 가입과 활동은 민주주의 정원이라 할 수 있다. 이미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과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낮춰야 한다는 상임위원회 결정을 국회의장에게 보낸 적이 있으며, 정치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 전통사회의 ‘성인’이나 ‘성숙’의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 한다며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⁷⁾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정당법 개정의견 초안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바 있어 아쉽기는 하지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정당가입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는 정부기관에서조차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민사회에서 앞장서 문제인 정부와 각 정당들과의 논의를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

III. 결론 - 학교와 지역사회를 정치참여의 장으로

앞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정치교육과 모의투표의 시행, 정당 활동의 자유는 많은 국가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 순기능이 확인되고 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교의 정치화 또는 학업분위기의 훼손은 오히려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역설에 불과하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존재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학교는 닫힌 교문을 열고 청소년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에 필요한 이러한 제안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또한 끊임없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정치참여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하여야 하며, 제도권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현재 경기도, 경상남도교육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여 필수교육과정에 삽입하고, 정치권과 더불어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7)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2012)

내년 6월 13일은 지자체선거와 교육감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번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운동의 연장선에서 교육감선거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여야 한다. 교육감선거에서의 선거연령 인하 운동과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 그리고 학교안에서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학계, 시민사회, 이에 대한 우호적인 정당과 정치인들과 함께 폭넓고 과감한 연대가 필요하다.

콜럼버스의 달걀은 콜럼버스의 것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들은 현재 93%에 달한다. OECD 가입 35개국 중 만 19세인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⁸⁾ 가장 최근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였다. 영국은 1969년, 캐나다는 1970년, 미국은 1971년, 호주는 1973년, 독일은 1976년에 모두 만 18세로 선거권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사실 다른 나라처럼 선거연령을 하향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시민사회가 성숙해지고 청소년들의 삶이 갑자기 나아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 참정권의 실현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이룩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현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하기 때문이다.

굳이 대한민국의 18세가 이행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를 열거하지 않아도, 18세가 되면 현재 할 수 있는 여타의 국가적 허용 사례를 애써 나열하지 않아도, 현 시대의 상식에 부합하는 법 제도의 개정과 시행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8) OECD회원국 중 폴란드는 21세

2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운영성과와 과제



조성익 [금천구청 교육지원팀 주무관]

금천구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 운영성과 및 과제⁹⁾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교육전문관 조성익

I. 들어가며 : 민주주의의 역사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이다.

역사상 ‘시민’이란 재산과 교육을 가진 제3계급으로 왕정에 대항하여 자유와 인권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근대의 특정 집단을 일컫는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참정’은 ‘선거권’으로 대표된다. 이 선거권의 확대가 시민계급의 확장을 선도하였다.

“현대의 시민은 선거권의 확대로써 모든 국민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돼 버린 것이지요. 전 국민이 초기 민주주의시대의 시민과 같은 시민 자세로 무장이 됐을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동하는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 이것이야말로 국민주권의 내실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원광대 명예박사학위 수여식 특강, 2007.6.8. 오마이뉴스 발췌¹⁰⁾)

최근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한다. 정치·경제 및 사회전반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성숙하지 못한 민주주의에서 찾기도 한다. 교육 문제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문제 역시 이해당사자간 불평등한 지위나 역할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을 ‘헬조선’이라 하고 ‘금수저’, ‘흙수저’하는 수저계급론의 등장은 기회의 불평등, 비민주적 의사결정,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 등에서 비롯한다고 하겠다.

인구절벽 및 초고령화는 경제성장의 적신호를 준다면, 민주주의의 후퇴는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9) 본 글은 2016년에 필자가 작성한 『금천구청소년의회 “교복입은 시민” 운영사례』를 2017년 기준에 따라 보완함.

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415297

II. 금천구 청소년사업의 촉진배경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주목받은 금천구청소년의회와 금천구 총선거는 앞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확장하려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금천구는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2010~2014)를 시작하면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철학으로 교육과 복지, 일자리 관련 사업에 역점을 두었다. 교육서비스를 통해 성장한 구민은 적정한 일자리를 통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안정적 삶을 보장받는다.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구정철학은 조직체계에 반영되어 있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지원하는 부서에 여성가족사업 중 하나인 청소년분야를 포함하여 부서 내에서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금천구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팀, 청소년팀, 진로교육팀이 긴밀하게 협의하기에 청소년 분야 정책에서 다양한 시너지를 내고 있다.

청소년사업과 학교지원사업의 결합은 자치구 행정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행정기관인 자치구가 교육기관인 학교·교육청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사업추진 성과를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천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시교육청)과 관내 모든 학교와 끊임없이 신뢰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정책사업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통해 지역차원의 공교육 여건을 혁신하려는 시도는 청소년활동진흥 및 청소년권리신장 정책의 직접적인 동인이 된다.

이를 종합하면, 금천구 청소년사업은 학교교육 등 교육자치를 지원하는 사업체계와 사람중심의 주민복지 서비스 증진체계를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주민협치’를 중시하는 서울시의 정책기조 역시 금천구의 청소년사업을 촉진하고 있다.

Ⅲ. 금천구청소년의회를 만들기까지

청소년기본법¹¹⁾에서는 청소년은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도 지난 2012년부터 ‘금천청소년별발두레단(약칭 금별단)’이라는 명칭의 금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금천청소년참여위원회는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30명을 공개모집하여 청소년정책토론회, 청소년연합축제 등 다양한 청소년사업을 직접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 금천구청소년참여위원회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정책참여와 지방자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천이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친구, 학부모 850명의 서명을 받아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제안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됐다. 경찰은 야간 자율학습이나 학원이 끝나는 귀가 시간대인 오후 9~11시 순찰을 강화해 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청소년들이 사거리를 안전하게 오가게 된 것은 ‘금천청소년별발두레단’의 활약 덕택이다.”

(2013.12.27. 서울신문¹²⁾)

2013 청소년정책토론회 ‘별바라기’



2015 청소년연합축제 ‘두근거릴 줄’



11)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1227015010>

금천구는 청소년 정책참여활동을 통해 청소년대안공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2013년부터 청소년문화공간 ‘꿈꾸는 나무(약칭 꿈나)’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꿈나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청소년이 스스로 그 목적을 발굴하는 의미에서 ‘대안공간’이다. 따라서 공간의 운영·관리를 청소년 스스로가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꿈나운영단’을 조직하고,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꿈나 1층 청소년 카페 경영을 청소년카페 운영팀 청소년이 직접 맡아, 메뉴개발, 영업 및 정산관리에서 수익분배까지 청소년끼리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 청소년문화공간 ‘꿈꾸는나무’를 운영하고 있는 ‘꿈나운영단’ 청소년들이 운영 수익금을 지역 장학재단인 ‘금천미래장학회(이사장 박준식)’에 기부했다. … 이번 기부는 청소년들의 ‘꿈꾸는나무’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운영단 스스로 매달 수익금을 일정비율로 적립하여 사회로 환원하자고 결정했다.” (2014.9.23. 아시아뉴스¹³⁾)

꿈꾸는 나무 운영단 장학금 전달



꿈꾸는 나무 청소년휴카페 운영



여러 해 동안 청소년의 지역활동 경험이 쌓이고 선·후배 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금천구 청소년들은 자연스레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시민”, 집단지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면서 청년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개개의 청소년들을 청년공동체로 성장시키면서, 금천구는 민간단체인 “꿈지락 네트워크”와 함께 청년과 청소년의 연계방안을 기획하였다. 금천구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단체인 꿈지락네트워크¹⁴⁾는 청소년-청년의 동반성장 순환체계를 만드는 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13)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714848&thread=09r02>

14) <http://www.ggumjirak.org>

IV. 정책대결을 지향하는 청소년정당제, 금천구청소년의회

금천구는 금별단(금천청소년참여위원회)의 대표성 및 책임성 부족 등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금천구청소년의회를 검토하였다. 금별단은 구성원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므로 참여의 제약이 없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정보 전달의 한계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금천구 청소년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금별단에서 제시하는 정책이나 제안하는 사업은 이미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더러 있어 애써 발굴한 제안이 쉽게 사장되곤 한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청소년 참여 정책이 무책임하고 소모적인 행정행위로 전락해 버린다는 우려도 생겨났다.

금천구청소년의회는 다양한 청소년집단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여 ‘금천구청소년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 자치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전체 청소년의 대표성과 대의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금천구청소년네트워크에는 선거를 통해 전체 학생의 대표로 뽑힌 학생집단(학생회, 학생회간부 등) 중 참여의사가 있는 청소년이 참여한다. 제도권 학교에 속하지 않은 학교밖청소년이나 참여의지가 있지만 비록 학내 학생자치기구에 속하지 못한 학생에게도 자기추천을 통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금천구가 운영하는 금별단 역시 금천구청소년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정하는 등 총 100여명의 청소년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금천구청소년네트워크 워크숍



금천구청소년네트워크 국회방문



하지만 어떤 조직이든 100여명은 적은 인원이 아니다. 따라서 금천구청소년 네트워크는 운영의 편의상 분과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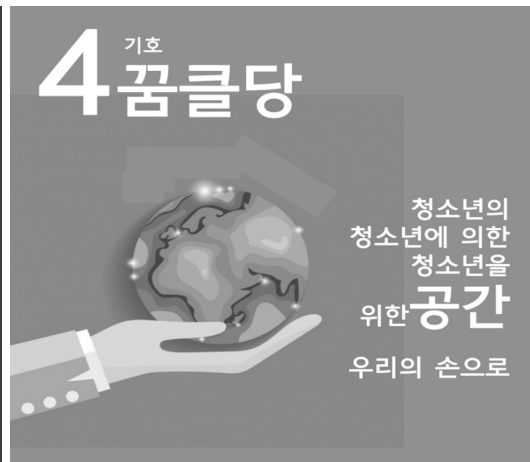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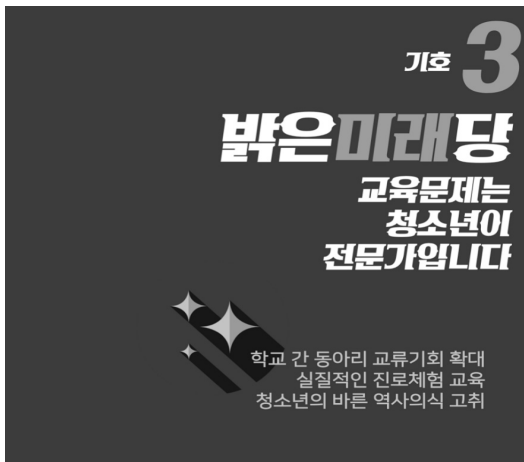
금천구청소년의회 초기 기획에서는 전체 조직을 관심 있는 주제별 5~6개로 나눠서 운영하기로 정하였다. 하지만 관심 주제별 분과로 구분하는 것이 기존 청소년자치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등 유사사업과 차별화되지 않아서 신규사업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바탕으로 고안한 방식이 현 ‘청소년정당제’이다.

형태로 본다면 주제별 분과(위원회)제나 정당제는 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와 후자는 운영가치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분과제는 전체를 필요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나눈 방식이라면, 정당제는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 방식이다. 따라서 전자가 피동적인 청소년자치의 모델이라면, 후자는 청소년 참여자의 의지가 담긴 능동형 청소년자치 모델인 셈이다.

금천구는 청소년정당제를 고안하여 금천구청소년의회의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정책을 기준으로 각 정당으로 이합집산 하는 과정에서 출신학교끼리의 패거리문화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현실 정치의 정당정치제를 모사하면서 실제 정당정치의 작동원리를 체득하게 된다. 청소년당원은 의원으로 당선되고, 집권정당이 되기 위하여, 사회수요를 감안하고 실현가능한 책임 있는 정책공약을 연구하게 되었다.

제2대 금천구청소년총선거 정당별 주요정책



제2대 금천구청소년총선거

금천을 바꾸는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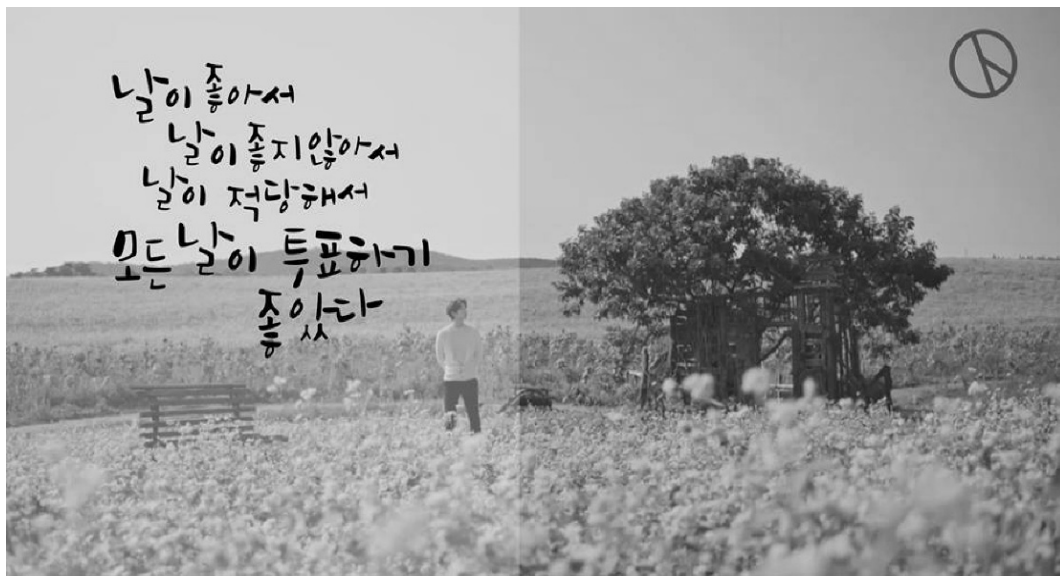
2017. 5. 13. 12:00~17:00



이전에 단순히 제안만 하던 정책토론회와 달리 청소년정당은 정책으로 선거를 치르며, 결과에 따라 집행력을 보장받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금천구는 청소년정당의 정책이 청소년의원 또는 청소년당원들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 예산을 ‘청소년참여예산’으로 확보하였다.

청소년정당제와 청소년정책구현, 청소년참여예산 도입 등을 토대로 금천구는 청소년 총선거를 기획하게 된다. 정당정치가 선거를 통해 집권을 하는 원리를 착안하여, 금천구청소년총선거는 정책으로 대결하는 비례대표방식의 정책투표로 결정하였다.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소선거제 현실정치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천구청소년 총선거는 금천구 전체가 단일 선거구인 중·대선거구제를 채용한 것이다.

제2대 금천구청소년총선거 홍보포스터



제2대 금천구 청소년 총선거

유 권 자 : 금천구 거주 청소년 (중1-고3에 해당하는 전연령) 또는 금천구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방법 : 청소년증,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간단한 신분확인을 거쳐 현장 참여
 참가혜택 : 봉사활동 2시간 인정 (1365 봉사활동 아이디를 반드시 알려주세요)
 선거일시 : 2017년 5월 13일 (토) 12:00 - 17:00
 선거장소 : 금천구청 앞 광장

제2대 금천구 청소년 총선거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의 금천구 청소년 자치사업입니다



선거 시기 결정도 중요한 요소였다. 제1대 금천구청소년의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3일에 실시되는 것을 감안하여, 현실정치 선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선거의 관심이 높을 시기를 검토하였다. 또한 그 즈음이 ‘세월호참사 2주기’임을 감안하여 청소년끼리 연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4월 16일을 금천구청소년총선거일로 정하였다. 최초로 치러질 금천구청소년총선거는 참사라는 비극적 슬픔을 딛고 당당히 청소년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선언하는 날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다.

“금천구의회 초대위원장인 금천고등학교 박정집 학생은 “금천구청소년총선거인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2주기인데 무조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금천구청소년의회 활동으로 청소년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찾아오길 바란다”며 말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현행 정치제도를 근간으로 구성한 청소년의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선거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의 가치와 원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금천구가 청소년 참정권이 시작되는 민주주의 성지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16.4.13., 경향신문¹⁵⁾)

제2대 금천구청소년총선거 세월호 추모의식¹⁶⁾



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31300001&code=620101

16) 제2대 금천구청소년총선거 (2017.5.13. 실시)

V. 권리의식의 확대 : 주민참여예산심의 → 마을정부의 구성

제1대 금천구청소년의회(2016년)가 구성되면서 금천구는 곧바로 기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에 청소년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된 제도¹⁷⁾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 주민은 직접 민주주의에 형태로 사업을 제안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금천구 역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주민참여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기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금천구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청소년 자치기구가 참여예산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안이 있었지만, 의사결정 집단을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2016년 청소년의회가 구성되면서 이전에 실행하지 못했던 청소년의 정책참여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고, 청소년의원과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금천구는 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하여 청소년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었다. 즉 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일부를 청소년의회에 이양하고, 그 의결사항을 존중하기로 정하였다.¹⁸⁾ 금천구청소년의회는 주민참여예산 중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하여 모든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심의하고 의결하기로 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왔다.

17) 네이버지식백과 『주민참여예산제』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187&cid=43667&categoryId=43667>

18)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및 참여증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업무협력 협약 (2016. 9. 21)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및 참여증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업무협력 협약 (2016.9)



1. 구는 금천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중 교육 및 청소년 분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2.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중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권한 일부를 청소년 의회에 이양하고, 그 의결사항을 존중한다.
3. 청소년의회는 주민참여예산 중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하여 모든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심의하고 의결한다.

그 전까지 청소년의회는 그들이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촉구하고, 요구하는 단계였다면, 협약 이후부터는 청소년이 직접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이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청소년 관련 사업과 예산을 구성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 경험은 소위 ‘청소년에 의한 행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정당은 공약을 세우고 모든 청소년으로부터 선거로 자리매김 했지만, 그 공약을 실행할 기회가 없었다. 대부분의 청소년 관련 사업은 구청의 청소년 담당부서나 지역사회를 통해 사업이 실행되고 있어서, 각 정당 입장에서는 간접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제1대 금천구청소년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소년정당이 직접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마을정부를 고안하였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서 ‘마을총리’가 뽑히고, 마을총리는 모든 정당의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부처를 구성하게 된다. 부처가 구성되면 마을총리는 각 정당의 청소년당원을 ‘마을정부장관’으로 지명하고, 금천구청소년네트워크 주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부의 대표성을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구상은 제2대 금천구청소년의회를 통해 실현하고 실행하고 있는 중이다.

제1대 금천구청소년마을정부 구성¹⁹⁾

부처명	주요사업	장관	비고
마을장관 : 오경선			
루 미 토 리 부	• luminous + history 합친 이름 • 청소년들의 바른 역사 의식 고취 •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	임 권 호 (밝은미래당)	
샤 부 샤 부	• 다양한 재료 사용 샤부샤부 음식유래 • 모든 학교들이 모여 체육 교류활동 및 학교 간 체육대회 실시	김 은 수 (꿈틀당)	
깜냥깜냥부	• 자신의 힘을 다하여라는 뜻 • 청소년 선거권 확대 요구	이 온 (할수있당)	
팝 팝 부	• 톡톡튀는 아이디어 상징 • 청소년 인권 신장에 힘쓰	박 수 빈 (똑같이위풍당당)	
꿈 나 르 샤부	• 꿈과 날아오르다 라는 뜻 • 청소년들이 꿈을 펼쳐 나갈 공간 발굴	최 예 지 (꿈클당)	

19) 2017년 교복 입은 시민 제2대 금천구청소년의회 제1회 정례회 (2017.6.10.)

VI. 맺으며 : 즐거움 시작 → 청소년인권 증진 → 참여민주주의 실현

지난 2017년 5월 13일 제2대 금천구청소녀총선거를 치르면서 청소년당원, 청소년의원후보자 그리고 선거에 참여한 청소년유권자 모두 이전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즐거움을 만끽하였다. 실제 투표와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기에, 그동안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었던 ‘실제투표’ 참여자체에 호기심이 많았다. 또한 자신이 정한 정당, 그 정당의 정책에 표를 행사하여, 청소년정책에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겨났다. 무엇보다 자신의 표가 사표(死票)가 되지 않고, 100% 반영되어 지지하는 정당의 의원이 당선되는 참여민주주의를 경험이 쌓였다.

제2대 금천구청소녀의원 총선거 결과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는 언제나 시행에 부담이 따른다. 청소년네트워크, 청소년정당제, 청소년총선거 등 지난 일련의 프로젝트 기획이 3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들었다. 이를 통해 구성된 제2대 금천구청소녀의회의가 ‘청소년의회’라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 권한과 책임을 정하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사람의 합의가 필요할지 모른다.

앞으로 금천구는 청소년전문가, 학생자치 담당교사 및 지역 청년네트워크와 보다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20~30대 젊은 유권자의 표심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았다. 투표하지 않는 젊은 층에 대한 비난, 걱정도 많이 여론을 뜨겁게 달궜다. 젊은 층이 투표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0대 청소년기에 참여민주주의 경험이 부족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금천구청소년총선거가 스스로의 권리를 가꾸고 키워나가는 참여민주주의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

3

청소년정치참여 요인 및 활성화 방안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소년의 정치참여요인 및 활성화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PI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청소년 정치참여

국정농단사건

유례없는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사건으로 2016년 10월 말부터 2017년 3월 10일 대통령탄핵까지 거의 매주 토요일에 촛불집회가 열렸음.
가족과 함께 집회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모습이 많았고 특히
청소년들은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에 대한 분노를 많이 표출했음.
또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예) 틴즈티모 기자회견

청소년 정치참여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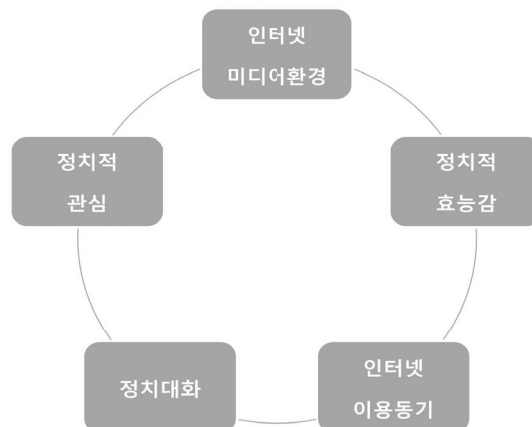
국민의 참정권 확대

- 국민투표확대
-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입검토
-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 투표시간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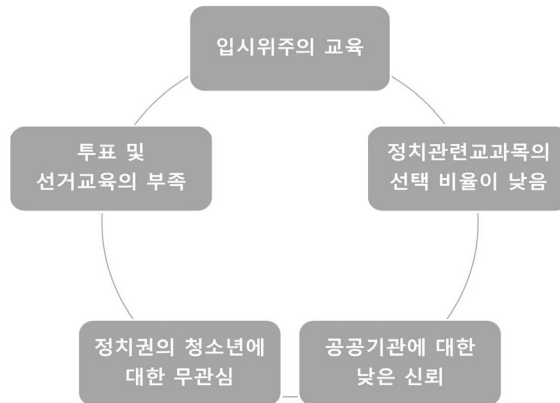
국민의 정치참여확대

- 정당가입연령제한폐지
- 공무원, 교사의 정치참여보장
- 정당, 선관위 민주시민교육확대
- 풀뿌리민주주의 확대

청소년 정치참여요인



청소년 정치참여 장애요인



청소년정치참여 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	2017년 3월 28일 - 4월 18일
표집방법	층화집락추출 -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 특성화고)과 4개 권역(수도권, 강원/충청권, 전라/제주권, 경상권)으로 층화한 후 학생규모를 고려하여 추출 학교수 결정
추출학교수	모두 17개 학교 (학교당 학년당 1개 학급을 조사)
표집수	총 1,430명 (남학생 807명, 여학생 623명)

청소년정치참여 실태조사 개요

주요 조사문항 및 출처

조사영역	조사문항 수	출처
미디어이용정도	6문항 (라디오, TV, 인터넷신문, 포털, 소셜미디어, 정치팟캐스트)	이창호, 성윤숙, 정낙원 (2012)
소셜미디어를 통한 경험	4문항 (게시글 읽기, 의견달기, 퍼나르기, 온라인청원)	배상률(2015)
정치에 대한 관심	5문항 (정치적인 이슈, 정부정책 정당, 정치인, TV정치토론)	김은미, 양소은 (2013)
정치효능감	3문항 (국가정책에 대한 합리적 판단,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 관심과 참여의 국정운영 도움)	김명정 (2009), Jung et al. (2011)
정치적 대화	5문항 (친구, 부모, 교사, 친척, 온라인친구와의 정치적 대화 정도)	자체개발

청소년정치참여 실태조사결과

선거연령 하향 (18세 이상)

		반대	찬성	잘 모르겠음	전체	유의성
전체		262 (18.4%)	940 (65.9%)	224 (15.7%)	1,426명 (100.0%)	
성별	남	159 19.8%	512 63.8%	132 16.4%	803 100.0%	Chi-square =3.96 (유의하지 않음)
	여	103 16.5%	428 68.7%	92 14.8%	623 100.0%	
학년별	1학년	93 20.4%	272 59.9%	90 19.7%	456 100.0%	Chi-square =17.63 p(0.01)
	2학년	77 15.3%	363 72.2%	63 12.5%	503 100.0%	
	3학년	92 19.7%	304 65.1%	71 15.2%	467 100.0%	
소득 수준별	상	22 20.6%	65 60.7%	20 18.7%	107 100.0%	Chi-square =4.05 (유의하지 않음)
	중	232 18.7%	82 66.0%	190 15.3%	1,242 100%	
	하	8 11.1%	52 72.2%	12 16.7%	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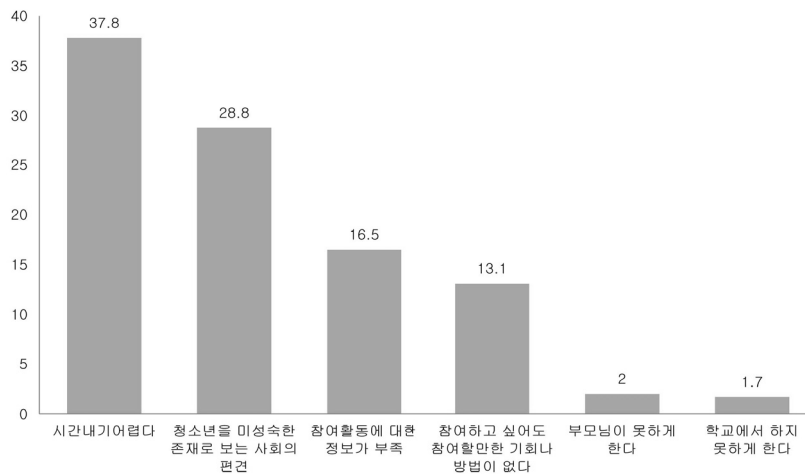
국정농단 이전 투표연령에 대한 의견

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175

		만 19세보다 낮춰야 한다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잘 모르겠음	전체
전체		24.7%	53.3%	6.0%	16.0%	100%
성별	남	27.2	47.5	7.2	18.1	100%
	여	21.8	59.7	4.7	13.8	100%

청소년참여 장애요인

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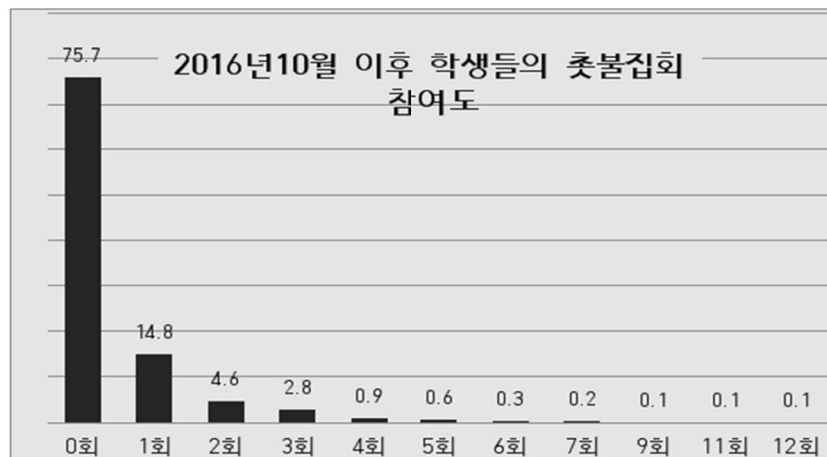
청소년정치참여 실태조사결과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16세 이상)

		반대	찬성	잘 모르겠음	전체	유의성
전체		422 (29.6%)	733 (51.5%)	269 (18.9%)	1,424명 (100.0%)	
성별	남	266 33.2%	393 49.1%	142 17.7%	801 100.0%	Chi-square =11.27 p<0.01
	여	156 25.0%	340 54.6%	127 20.4%	623 100.0%	
학년별	1학년	106 23.2%	249 54.6%	101 22.1%	456 100.0%	Chi-square =28.00 p<0.001
	2학년	141 28.1%	278 55.5%	82 16.4%	501 100.0%	
	3학년	175 37.5%	206 44.1%	86 18.4%	467 100.0%	
소득 수준별	상	26 24.3%	62 57.9%	19 17.8%	107 100.0%	Chi-square =4.48 (유의하지 않음)
	중	378 30.5%	627 50.6%	235 19.0%	1,240 100%	
	하	16 22.2%	42 58.3%	14 19.4%	72 100.0%	

청소년정치참여 실태조사결과

촛불집회참여 횟수



청소년정치참여 실태조사결과

촛불집회참여여부에 따른 정치적 관심, 효능감, 대화 차이

		평균	표준편차	유의성
정치적 관심	비참여	2.40	0.68	t=7.52 (p<0.001)
	집회참여	2.72	0.66	
정치적 효능감	비참여	2.73	0.65	t=7.12 (p<0.001)
	집회참여	3.02	0.66	
정치적 대화	비참여	2.11	0.54	t=8.93 (p<0.001)
	집회참여	2.41	0.60	

청소년정치참여 요인 분석

촛불집회참여여부(참여=1)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B	우도비 (Odds Ratio)	95% CI
인구학적 변인	성(여학생=1)	0.156	1.169	0.896 ~ 1.525
	경제수준(1~7)	0.012	1.012	0.890 ~ 1.151
정치사회적 변인	관심	-0.054	0.948	0.720 ~ 1.247
	효능감	0.240*	1.272	0.983 ~ 1.646
	대화	0.447**	1.563	1.174 ~ 2.081
미디어이용	라디오뉴스	0.079	1.082	0.901 ~ 1.300
	TV 뉴스	0.219*	1.245	1.023 ~ 1.516
	인터넷신문뉴스	0.188*	1.207	0.678 ~ 0.967
	포털뉴스	-0.146	0.864	0.705 ~ 1.058
	소셜미디어뉴스	-0.211*	0.810	0.678 ~ 0.967
	정치닷컴뉴스	-0.055	0.943	0.780 ~ 1.139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		0.758**	2.135	1.671 ~ 2.728
-2 loglikelihood			1394.91	

청소년정치참여 실태조사결과

투표참여의향

투표의향	평균	표준편차
1) 지방선거 (광역시, 도)	2.94	0.91
2) 지방선거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장)	2.95	0.91
3) 국회의원선거	3.25	0.88
4) 교육감선거	3.26	0.89
5) 대통령선거	3.67	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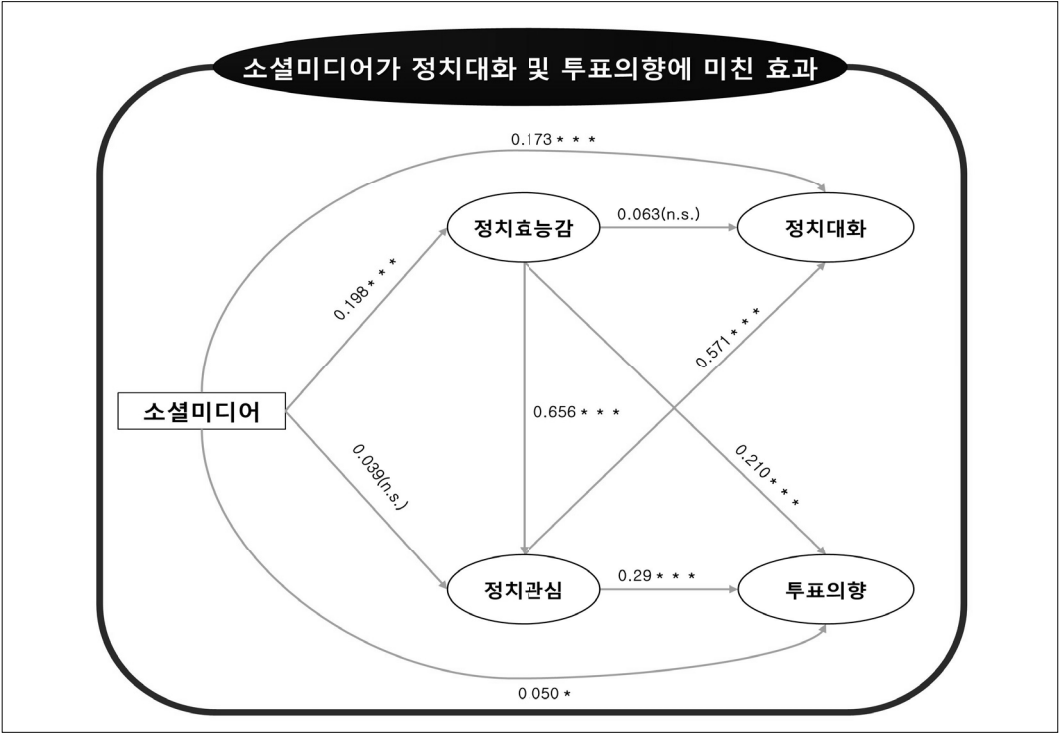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1점=전혀 투표할 의향이 없다 - 4점=반드시 투표하고 싶다)

청소년정치참여 요인

투표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B (표준화계수)	t 값	VIF
인구학적 변인	성(여학생=1)	0.148**	6.532	1.040
	경제수준(1~7)	0.008	0.349	1.009
정치사회적 변인	관심	0.301**	9.376	2.092
	효능감	0.240**	8.580	1.584
	대화	0.001	0.024	1.592
미디어이용	라디오뉴스	0.018	0.716	1.254
	TV 뉴스	0.020	0.784	1.372
	인터넷신문뉴스	0.026	0.968	1.473
	포털뉴스	0.052*	1.932	1.485
	소셜미디어뉴스	0.030	1.166	1.300
	정치팟캐스트	-0.051~	-1.943	1.404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	-0.021	-0.687	1.884
충돌집회참여여부(참여=1)		0.079**	3.346	1.124
수정된 R 제곱			0.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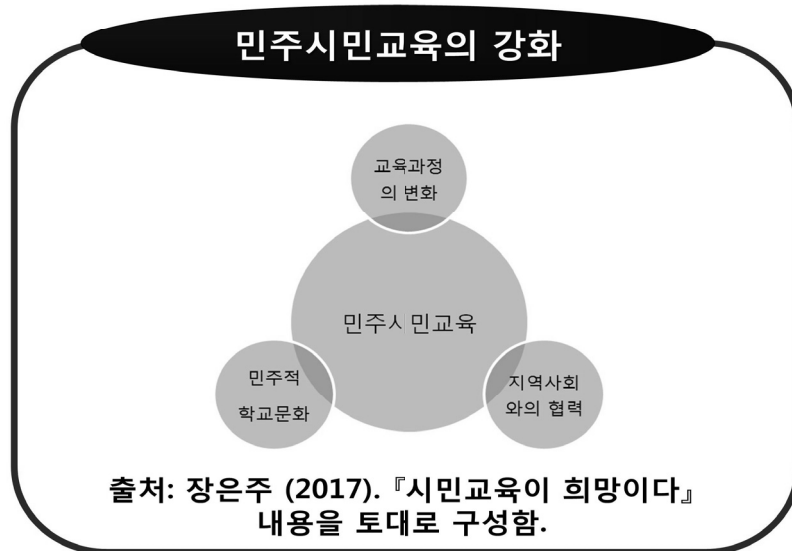
주요 변인들의 직, 간접효과 및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소셜미디어뉴스 → 정치효능감	0.198***		0.198**
소셜미디어뉴스 → 정치관심	0.039	0.130**	0.169**
소셜미디어뉴스 → 정치적 대화	0.173***	0.109**	0.282**
소셜미디어뉴스 → 투표의향	0.050*	0.095**	0.145**
정치효능감 → 정치적 대화	0.063	0.375**	0.438**
정치효능감 → 투표의향	0.210***	0.205**	0.415**
정치효능감 → 정치적 관심	0.656***		0.656**
정치적 관심 → 정치적 대화	0.571***		0.571**
정치적 관심 → 투표의향	0.313***		0.313**

청소년정치참여 실태조사

정치참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평균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2.94
리더십함양교육	2.87
민주시민교육	2.79
국회나 도/시의회등 정치기관 견학	2.75
모의선거	2.67

청소년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청소년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2016년 9월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음. 이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5년단위 수립, 민주시민교육원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학교단위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청소년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정치교육의 원칙 합의

독일의 경우 1976년 모든 정파의 정치인들과 교육자들이 보이텔스바흐라는 소도시에 모여 정치교육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함(장은주, 2017). 이 합의에 따르면, 교사는 어떤 수단을 써든 학생들에게 특정한 견해를 주입해서는 안되고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시간에도 논쟁적으로 드러나야 함 (189-190쪽). 따라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정치교육에 관한 일정한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청소년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수업시간을 통한 정치토론 활성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 하에서 청소년들은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진지한 토론보다는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 정치적인 제도나 체계에 대해 암기하기에 바쁜 실정임. 따라서, 사회탐구영역시간을 활용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정치적인 문제나 사안, 쟁점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입식교육의 틀을 과감히 깨뜨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서로 논의하는 토론식 교육의 체계가 확립돼야 할 것으로 보임.

청소년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모의선거를 통한 정치참여의 확대

5월 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됐지만 각 후보자의 정책을 상호 비교하고 논의하는 과정은 학교교육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음. 오히려 YMCA 전국연맹 등이 주관한 모의투표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음. 5월 9일 전국 30여개 투표소에서의 오프라인투표와 온라인투표(www.18vote.net)를 통해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은 모의투표를 실시하였음(중앙일보, 2017. 5. 1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기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모의선거가 이뤄진 면에서는 아쉬움이 큼. 향후 학교교육의 틀 속에서 모의선거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를 경험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될 것으로 예상됨.

청소년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참고: 일본고교생의 정치의식 조사

- 본 조사는 사이타마시의 4개 시립고등학교에서 이뤄진 것으로 모두 925명의 고등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조사는 선거 연령이 하향된 지 몇 개월이 지나 이뤄진 것으로 2015년 9월 실시되었다. 이 조사가 우리와 이웃한 일본청소년의 정치관련 의식을 대표한다고 볼 순 없지만 일본 청소년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면에서 가치가 있다.

* 본 자료는 일본의 저널인 Policy & Research No. 10 (February 2016)에 발표되었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뒤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임.

청소년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참고: 일본고교생의 정치의식 조사

먼저, 18세가 되면 투표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가 투표를 하겠다고 했고 모르겠다는 응답도 34%에 달했다. 투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에 불과하였다.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에게 왜 투표할 생각인지 물어본 결과 “국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가 46%로 가장 많았다.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이유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므로”가 27%로 가장 많았다.

18세 이상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4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20%가 반대했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32%에 달했다. 선거연령하향 찬성의 이유로는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청년의 의견을 더욱반영시킬 수 있으므로”와 “젊었을 때부터 정치에 대해 생각하는 게 좋으므로”가 각각 29%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대이유로는 “18세에 세상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가 32%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정치참여 활성화 방안

참고: 일본고교생의 정치의식 조사

가장 많은 응답자들(34%)이 **학교에서 정치나 선거에 관한 신문 기사를 사용한 수업**을 받는 것이 고교생의 정치관심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에서 정치나 선거에 관한 토론이나 대화**를 하는 것이 25%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청소년의 반 이상(52%)이 국가나 지방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정치에 대해서는 9%가 만족한 반면 45%는 불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4

토 론 1



임영진 [고운중학교 교사]

학교에서 시작하는 민주주의

임영진 (고운중학교 교사)

“청소년의 정치에 참여해도 되나요?” 이 질문은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받았던 질문입니다. 당황스럽더군요. 처음엔 제대로 답변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해도 되나요?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정치에 참여해도 되지요. 청소년들이 3.1운동과 4.19혁명에 앞장서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이들은 정치에 참여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들은 저에게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해도 되냐고 묻고, 저는 당연히 그래도 된다고 바로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이들이 제게 물은 이유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 배워본 적도 없고, 참여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또한 8년째 교단에 서면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가르쳐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청소년들이 정치는 나의 생활이고, 내가 참여한 만큼 좋아진다는 것을 학교를 통해 배우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활성화 방안 제안

1. 초중고 교육과정에 정치참여와 관련된 내용 확충

현행의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치부분은 정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며, 참여와 관련된 내용은 매우 미비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통합사회 영역에서 정치참여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고교 선택과목에서 정치와 법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은 초중등 교과 과정에서 정치 참여에 관해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2. 학교교칙제정절차에 학생 참여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심의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원과 구성원 선출 절차에 학생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학칙 제정 및 개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결정에 학생들의 의견은 제한적으로 반영되거나 무시되곤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구성원선출에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학생들의 참여가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나의 참여가 세상을 바꾸고,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효능감을 얻을 것입니다.

3. 청소년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부당한 요구나 압력에 대한 제제 및 인식전환활동

지난 10월의 촛불집회참가와 같은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라, 참가를 독려하지 못하게 하라는 등의 요구가 많았으며, 학생들이 공부나 하지 여기에 왜 나왔느냐 하는 따가운 시선도 많았습니다. 그 시기에 광화문에 나가보는 것 만한 공부가 있을까요? 정치는 관심이 무관심보다 언제나 좋습니다.

5

토 론 2



이종희 [선거연수원 교수]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세미나

- 토 론 문 -

선거연수원 교수 이종희

정보화 시대가 가속화 되고 시민사회가 활성화 됨에 따라 다양한 집단의 선거와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치현안에 대한 참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건전한 시민의식이 바탕이 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우리의 정치는 지역주의, 정치 불신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집단의 정치현안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세대, 계층, 이념 갈등도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가 숙의되는 민주적 공론장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 세월호 사건, 탄핵정국의 촛불시위 등에서 청소년들은 중요한 참여 주체가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로 정치적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정치적 이슈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관심사에 바탕을 둔 건전한 시민의식 육성의 필요성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건전한 시민의식 육성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도 지식 습득 위주의 교육보다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좋은 사례로 독일의 청소년 모의선거(Juniorwahl 유니어 발)를 들 수 있다. 청소년 모의선거는 선거일 7일 전부터 실제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며, 실제 선거 당일 6시에 정식 투표가 종료된 직 후 청소년 모의선거 결과가 먼저 발표된다. 청소년 모의선거는 연방총선, 주의회선거, 유럽의회선거 시에 실시되고 있다. 즉, 독일 청소년들은 모의 선거를 통해 선거과정을 체험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 모의선거에 참여하는 학교에서는 한 달 동안 후보자들의 공약집 등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직접 선거를 관리한다. 모의선거는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투표하거나 온라인으로 투표한다. 청소년들은 공약집, 후보자토론회 등을 통해 후보자들을 비교, 평가한 후 투표한다. 모의선거 참여 여부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며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청소년 모의선거는 독일 최대 규모의 학생 대상 프로젝트로 꼽히고 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모의선거에 이제까지 총 백만 명가량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연방총선에서는 독일의 모든 주에서 청소년 모의선거가 실시되었다. 당시 요하네스 라우 대통령이 주축이 되어 연방정부와 연방정치교육원의 협업으로 청소년 모의선거를 진행하여 그 해 약 8만 명의 청소년들이 모의선거에 참가하여 86%의 투표 참가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2004년 유럽의회선거에서는 세계 도처의 독일 국제학교와 연계하여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 청소년 모의선거가 실시되었다.

또한, 2009년 연방총선 시 독일 청소년 모의선거에 총 1,043개 학교가 참여하였고 약 24만 6천 명의 학생들이 투표하였다. 이번 9월에 실시되는 연방총선에는 총 3,420개 학교가 청소년 모의투표에 참가하고 있다. 독일은 2022까지 모든 학교에서 모의선거를 실시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독일에서는 청소년들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선거권을 부여받기 이전에 청소년들이 정치를 체험하고 경험할 기회를 갖는다. 즉, 독일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고 청소년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펼치면서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도 독일의 모의선거와 같은 민주주의 체험이 생활화된다면, 이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선거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관심사와 공익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정치의 질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6

토 론 3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 주도의 실천적 정치참여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이윤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 정치참여는 성인 대상의 참여와 동일한 시각에서 볼 수 있을까? 기존 연구에서는 정치참여를 주로 성인 중심의 선거, 단체 시위 혹은 집회참여에 대한 영역에 국한하여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의 시민의 권리와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차원의 정치참여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청소년 정치참여 영역에 있어서도 시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목적 중심의 활동이 폭넓게 포함되고 있다(Putnam, 1995, pp.31-33).

이와 같은 확장된 정치참여의 예로는 선거와 집회 및 시위 참여를 비롯하여 지역 공무원과의 접촉, 지역사회 정책 결정 참여, 정당을 포함한 여러 정치관련 단체에서의 활동, 가족 및 이웃들과 정치적 사안에 대한 토의 및 토론, 정책 참여 및 캠페인 활동, 청원서 작성, 미디어를 통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 전달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Verba와 그의 동료들(1995)도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잘못이고 오해이다. 투표 이외의 여러 형태의 정치적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정치적인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정치참여를 정의함에 있어 투표와 시위 및 집회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확대되는 시민들의 정치적·사회적 관심을 포괄하기에 한계를 가진다. 즉, 시민 참여의 범위가 확장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와 같이 시민 참여가 성인에 국한된 것만은 아님을 입증하다.

Kahne과 Sporte(2008)는 ‘청소년 정치참여’를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1>에서 보듯이 각 학자들마다 청소년 참여 활동의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 활동에 대한 공통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청소년 참여란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표-1〉 청소년 참여활동 개념

학 자	청소년활동 개념
Winter(1997)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생활환경에 참여하는 기회
Hart(1997)	청소년의 기본 권리로써,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과정
Checkoway(1998)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사람들이 관여(involving) 하는 과정
Jeniffer(2002)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하여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활동
박세일(2003)	청소년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결정과정, 지역사회의 각종 결정, 학교 혹은 가정의 여러 결정과정에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주장을 가지고 참여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
김영인(2007)	일반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사회, 직장 등과 같은 공적인 영역의 의사결정에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
UN 청소년국(2004)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 계획, 자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와 책임을 공유하는 과정
Council of Europe (1993)	책임과 의무를 떠맡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함되고 허용되고 조장되어야 할 청소년의 권리를 의미함. 이 때, 참여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계가 있는 과정에 영향을 주고, 지역 사회의 청소년 정책 개발에 관여하는 것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음
National Commission on Resources for Youth(1975)	참여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는 기획이나 의사결정 활동에 청소년이 책임감 있고 진취적으로 참여하는 것
Australia Youth Foundation(1999)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개발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 또한 그들의 생각, 기여, 활력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 (ESCAP)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사업, 의사결정 및 자원을 통제하는 과정을 의미함

출처: 박가나, 2008, p.64

국내·외적으로 청소년이 사회·정치적 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다음 <표-2>는 청소년 참여의 영역을 사회참여와 정치참여로 세분화한 것이다. 청소년 참여를 사회참여와 정치

참여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입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으로서는 청소년의 활동 중 정치적인 목적성을 강조한 선거,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성인 기준의 행위를 청소년 참여로 구분하기도 한다(김영인, 2007). 반면, 청소년 참여에 대해서 정치적 참여의 성격보다 봉사활동이나 자치활동을 강조하는 사회 참여적 성향으로 보는 입장이 존재하기도 한다(박가나, 2008; 하성민, 2013).

〈표-2〉 청소년 참여 방법에 따른 구분

영역	참여방식	내용
사회참여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위한 조직 구성 및 활동	지속적인 기간 동안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조직 예) 지역사회 청소년 모니터링 조직
	청소년단체나 NGO 가입을 통한 캠페인 활동	교내·외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단체나 환경, 인권 등의 문제를 다루는 NGO 가입을 통한 지속적인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일손 돕기나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예) 청소년성취포상제 내에서의 봉사활동
	모금 행사 활동	지역사회 내의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혹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모금행사를 조직하거나 주도적인 모금활동을 진행
정치참여	정책 제안을 위한 모임 조직 및 활동	청소년 정책 제안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입장 및 의견을 지역단체기관에 전달 예)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제도 등 정치적 입장이 담긴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캠페인 활동
	교내외 청소년 자치 활동	학생회 및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토대로 청소년 지도자 및 교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조성하는 체험중심 활동
	청소년위원회 및 의회 활동	청소년 인권보호나 정책마련을 위한 위원회 및 의회조직 활동
	보이콧, 집회활동을 통한 입장전달	청소년의 권익에 반하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비합법적인 활동

출처: Zukin, Keeter, Andolina, Jenkins, Carpin, 2006, p.25.

주로 학교에서는 정치참여보다는 사회참여의 영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참여 활동을 강조하는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 시행하는 참여 프로그램의 경우, 활동의 지속성이나 참여의 자발성 면에 있어서 청소년 참여의 본질에 적합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김명정(2009, p.46)은 학교에서의 교과활동으로 청소년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학교 교육은 지식 중심의 교육, 교실 수업이라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의 미래의 정치참여를 할 시민으로서의 참여 의사만을 강조할 뿐 현재 학교 교육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와 방안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은 그 설명력을 더해간다(이승중, 2007).

비록 청소년이 학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환경을 토대로 청소년 참여가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함으로써 학교에서 주로 행해지는 지식위주의 학습에서 기능적 실천 활동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차경수, 모경환, 2008, p.261). 물론 학교 교육에서도 실제적인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시·공간적 차원의 한계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 및 정치 참여기능의 종류와 교수-학습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 수업에서 실현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청소년의 사회 및 정치참여 교육은 주로 지식 위주의 내용으로 다뤄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밖 교육기관에서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숫자 또한 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참여활동은 소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기회를 늘리고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 참여기능으로 강조하는 방식에 있어서 대부분이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된 상황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주로 조직 단위로 행하는 집합 행동을 중심으로 한 활동들이 다수를 이루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활성화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 참여활동에서 강조 해야 할 정치참여 역량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에서 요구되는 시민 역량

시민적 역량	청소년 정치참여 활동 내용
의 사 소 통	대화 및 토론, 토의 과정에서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입장을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논쟁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 제시	민주주의와 정의를 우선시 하는 입장으로 논쟁문제를 통해 나타나는 현안에 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집합행동으로서 협력적 경험	사회적 문제나 딜레마로 인해 집합적 형태의 실천적 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 행동 경험을 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출처: Newmann, Bertocci, and Landsness, 1977, p.229; NCSS, 2013.

이와 같이 청소년 정치참여 학습이 시민성 함양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행동적 체험 혹은 경험에 대한 기술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의사결정 능력, 대화와 토론의 기능, 참여적 성향 등의 기능적 측면을 정치교육을 통해 함양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자질까지 확장시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김명정, 2009). 즉, 청소년 정치참여는 지식적 측면, 인지적 판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능과 활동으로 행해졌을 때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실제적 체험을 통해 민주주의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는 듀이와 하버마스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 듀이(1969)는 타인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치적 관용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선호와 이익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하버마스는 다원화된 사회 일수록 학생들에게 정치적인 경험을 토대로 한 책임감을 증대시킬 수 있고, 이러한 경험은 정치의식(political consciousness)을 신장시킨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할 때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 보다 확장된 시각을 갖게 해준다. 따라서 정치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반복될수록 청소년들은 보다 사회 및 정치적인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실천적 움직임을 토대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실제적인 행동을 반복하면 그 자체로서 체화가 이루어져

성인기에 들어와서도 정치참여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태를 보이게 될 것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청소년은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게 될 것이다. 즉, 성인이 된 이후에 바람직한 시민으로서 적극적인 참여 행동은 일시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반복 경험을 토대로 끊임없이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Kahne, Sporte, 2008).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치참여에 관한 부분은 지식적 측면에서의 이해 뿐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기능 학습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이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학습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을 쌓고 그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행위자 간의 관계적 상호작용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Parker, 1996).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활동에 대한 참가 여부만으로서 훈련된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여 활동을 통해 공감과 이해가 발생하여 실천적인 태도와 의식 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인(1999). “정치참여의 시민교육효과에 관한 시론”, 『시민교육연구』, 제29권, pp.43-65.
- 김명정(2009). 청소년 참여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가나(2008).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승중(2001). “참여를 위한 실천적 시민교육방안”, 『시민교육연구』, 제33권, pp.293-310.
- 이종렬(1995). “한국청소년의 정치사회화의 문제점과 정치교육의 과제”, 『사회와교육』, 제21권, 제1호, pp.9-41.
- 차경수, 모경환(2008). 『사회과교육』, 동문사.
- 최창욱, 전명기, 김윤희(2013).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청소년 개발원 연구보고서, 여성가족부.
- Agresti, A. and Finlay, B.(2009). Statistical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 Forth Edition, Pearson Education, Inc.
- Coleman,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4, pp.s95-s120.
- Dewey, J.(1916). Democracy and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 _____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Huckfeldt, R., Mendez, J., and Osborn, T.(2004). “Disagreement, Ambivalence, and Engagement: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Heterogeneous Networks”, Political Psychology, Vol. 25, No. 1, pp.65-95.
- Parker, C.(1996). Educating the Democratic Min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utnam, R.(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Stewart, J. and McDermott, C. (2004). “Civic engagement, political identity, and generation in developmental context”.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Vol. 1, No. 3, pp.189-203.
- Theiss, E.(1993). “Conceptualizations of good citizenship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Behavior, Vol. 15. pp.335-380.

7

토 론 4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센터장]

더 가깝고, 작은 민주주의로부터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센터장)

과연 청소년은 시민인가? 청소년은 의사표현의 자유도, 정치적 대표자에 대한 선출권도 없다. 하물며 ‘학생이 인간인가?’라는 질문을 수시로 받으며, 기본적 인권마저 제한 당한다. 지난해, 촛불혁명과 18세 선거권 운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돌아보면 나라에 엉뚱하고, 큰 일이 있을 때 마다 용기 있는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내었고, 그 결과로 이 나라는 조금 더 상식적이고, 바르게 교정된 길을 걷게 되었다. 나열해보면 일제치하에서 항일독립운동, 4.19 시민혁명, 민주화 운동, 참교육운동, 효순이미션이사태, 광우병사태 등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다. 평상시에 청소년은 공부하는 사람, 미성숙하고, 제한된 권리를 지녀도 되는 낮은 수준의 인간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나라에 큰 일이 생겨나면, 청소년은 시민으로 소환되고, 대접받는다. 아마도 나라에 엉뚱하고, 큰일들이 거듭, 거듭해서 일어난다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단번에 활성화되지 않을까?

청소년의 삶과 더 가까운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 참여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청소년 당사자의 삶과 더 가까운 영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17. 올여름. 토론자가 일하는 청소년센터에서 방학동안 청소년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엮들을 기회를 얻었다. 일부 청소년들은 나라의 적폐와 불공정함 등을 이야기 했지만, 대부분의 주장은 삶과 이어진 이슈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이다. 최근 청년실업이 큰 문제인데 청소년도 그 당사자라는 것이다. 또 대부분 학교 급식비는 4,500원으로 같은데 급식질의 심각한 차이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였다. 급식의 재료 선정과 식단의 구성, 급식비의 사용 내역 등이 급식을 먹는 당사자들과 논의되지 않고 결정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자유학기제 등의 새로운 교육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학교의 교칙을 제정할 때 학생 위원의 참여가 없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학교에서 경험하는

성적에 따른 수많은 차별을 근절해야 하고, 모두를 위한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차별을 없애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의 참여를 필수로 했으면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할 강력한 방안으로 교육감 선거에 학생 당사자가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민주주의와 시민, 정치참여를 이야기 할 때 우리는 늘 너무 큰 역사적 사건들을 소개한다.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을 길러내겠다는 국가 정책들도 있는데 국가 청소년 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요즈음에는 모의투표, 청소년의회, 100인 원탁토의 등의 형식을 빌리기도 한다. 큰 사건, 국가적 제도, 청소년의회나 100인 원탁 토의 등은 좋은 학습의 소재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만을 강조하면, 일상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만나는 민주주의와 시민, 정치참여의 중요성은 숨어버릴 때가 있다. 역사적 사건에 참여한 소수 용기 있는 청소년이라 던지, 국가 청소년위원회 등의 거대해 보이는 국가기구에 참여한 일부 청소년의 무용담이 회자되면서 “정치 참여는 아무나하기 힘든 거대한 활동이구나?”, 또 지금은 그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나?”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다.

더 작은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민주시민교육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는 좀 더 작고, 만만하게 시작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대부분의 학생이 거의 하루 온 종일을 살고 있는 학교와 마을이라는 작고, 가까운 공간에서부터 경험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아니꼬운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마을공동체와 학교 공간에서 청소년의 참여는 요원하기만 하다.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 마을의 분위기는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는 삶 속 작은 일에서 부당한 경험과 불편을 경험한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이슈에 분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쪼잔 해 보일 수 있다. ‘프로 불편러’라는 사회적 눈치를 무릅쓰고 구체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소수의 청소년 시민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설득할 논리는 언제나 있다. “네가 하는 말이 다 맞지만 아직은 어리니 조금 더 큰 후에, 대학 간 후에, 취업한 이후에 천천히 바꾸어보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해가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길은 이러한 불만과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들을 만나보고,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학교의 교육, 청소년시설의 활동은 그동안 제공자 방식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하지만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면 이제 청소년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응답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좋은 교육자는 청소년들의 앞에서 이끌기 보다는 뒤에서 거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또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이라는 이름으로 빨리 돈만 벌라고 말하지 말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살피고, 가꾸어가는 시민들과 연결되게 해보자. 현 교육제도와 사회시스템은 꿈을 키워서, 남들보다 위에 있는 소비자가 되고, 혼자서 잘 살아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한 개인’이 이런 가르침을 뛰어넘어 ‘공동체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청소년기에 공동체를 위한 작지만 소중한 일을 궁리하고, 직접 꾸려 볼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삶과 연결된 민주시민교육을 궁리해야한다.

활성화 방안 제안

1.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 투표권 부여, 전체 선거권 연령 조정 또는 교육감 선거가 포함된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 인하 시도
2. 학교운영위원회 청소년 참여, 학교교칙에 학생 의견 수렴
3.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고교학점제(마을, 자유학점제) 등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당사자의 참여를 높인 교육과정 운영
4. 자원봉사제도 개선. 봉사 학습의 개념을 더욱 중심에 두기. 수동적 활동에서 능동적 참여 활동->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
5. 동아리활동, 청소년참여활동 등 주체적 시민으로의 참여 경험을 입시에 반영
6. 민주적 경험을 확장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이라는 명분으로 동원시키지 않기 (100인 원탁)
7. 민주적 마을공동체와 학교, 사회분위기 성숙
8. 광화문1번가, 국회톡톡, 우주당, 빠띠 등 SNS, 인터넷 기반 청소년 참여 플랫폼 조성









